

# 21대 총선은 코로나19로 결정된 선거인가?: 코로나19 대응평가와 야당심판론에 의한 투표 변경 분석

박선경 | 인천대학교\*

## | 국문요약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잘 대처한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라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얼마나 타당한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결과인가, 혹은 코로나19라는 외생적 요인이 없었더라도 민주당이 승리할 만한 내생적 요인이 있었을까?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를 사용하여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평가와 야당심판론이 이전 선거와 이번 선거 간 투표 변경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상호작용 모델 분석 결과, 첫째,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이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도 야당심판론에 공감할수록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두 가지 상호작용 효과 중 야당심판론의 효과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효과보다 더 커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한 정부 덕분이기도 하지만, 야당의 실책에서 이익을 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 21대 총선, 투표 변경, 코로나19 대응 긍정평가, 야당심판론, 상호작용 효과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9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의 초고는 2020년 10월 30일에 열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주최 “2020 온라인 유권자 정치페스티벌” 학술토론에서 발표되었다. 발표 당시 논문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해주신 정동준 교수와 좋은 심사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1. 서론

본 연구의 일차적 목표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총선 직후 주로 언론이나 일부 연구들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대규모 전염병 위기에 잘 대처한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원인이라고 보았다(김만권 외 2020; 신정섭 2020; 오세제 2020).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원인으로 함께 언급되는 또 다른 요인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막말과 공천 파동 등 야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다(장승진 2020).<sup>1)</sup> 소위 야당심판론이라고 불렸던 이러한 정서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한 정부여당에 대한 긍정평가와 별개의 요인으로, 코로나19가 만든 외생적 상황이 아니라도 작동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앞선 주장과 반대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총선 직후 제기된 이런 주장들은 경험적인 근거가 있을까? 전자의 주장처럼 21대 총선은 코로나19라는 이슈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 선거였을까, 혹은 후자의 관점처럼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실책에 의한 어부지리로 승리했을까?

많은 연구들은 매번 선거 이후 특정 선거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이슈와 투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큰 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기하는 정확한 연구 질문은 이러한 코로나19의 정치적 효과가 전염병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만든 결과인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부가 코로나19위기에 잘 대응했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코로나19위기가 없었거나 정부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지 않았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민주

---

1) 야당에 대한 실망 혹은 야당심판론은 언론의 선거 분석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미디어오늘의 기사(노지민 2020)는 선거 다음날인 4월 16일자 종합일간지들의 선거분석 기사를 비교하여, 대부분의 종합일간지가 여당 압승의 원인을 야당의 실책이라고 언급했음을 보여준다.

당을 찍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이번 선거의 민주당 승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승리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을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전 선거와 현재 선거 사이 투표 변경에 영향을 미칠 외생 요인(신생 정당의 부상 등)이나 장기적인 내생 요인(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나 정당일체감 변화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통상적으로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가장 낮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본 연구는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나 야당심판론 중 어떤 변수와 관련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를 사용하여 상호작용 모델을 분석한 결과,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지만 야당심판론에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보다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상호작용 효과 중 야당심판론의 효과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효과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1대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코로나19만으로 인한 승리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야당의 실책 모두에서 이익을 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 
- 2) 위와 같은 반사실적(counterfactual inference) 질문에 대한 답은 실험연구나 자연실험을 통한 결과를 통해서 엄밀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설문조사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본 연구는 총선 직후 설문조사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본 연구의 이론 틀은 투표 변경(vote switching)에 관한 연구에 기반한다. 한국 선거에서의 투표 변경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개념적으로도 일부 연구들이 지지 이탈, 지지 정당 변경, 무당파나 부동층 등 유사한 용어를 엄밀한 구분 없이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투표와 정당 지지가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모두 다른 것처럼 투표 변경과 지지 정당 변경 역시 매우 다른 개념이며, 무당파와 부동층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개념이다.

정당에 대한 지지는 투표를 포함하여 한 정당의 정책이나 강령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를 표하는 것이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될 때 이를 정당일체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부 연구들이 정당 지지를 정당일체감의 대리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강명구·하세현 2014; 길정아 2013; 윤종빈 외 2015; 조기숙 2013; 최준영 2016), 여론조사자료에서 일회적으로 응답한 정당 지지에 대한 답변으로 정당일체감을 측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무리가 있다. 투표 선택 역시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거에서의 민주적 의무감 때문에 투표하거나 후보자 요인으로 투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지 정당 변경과 총선에서의 투표 변경을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구분할 것이며, 투표 선택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투표 변경은 일부 연구에서 무당파나 부동층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들이 선거 때마다 투표 변경을 할 확률이 높으므로 투표를 변경한 사람들을 무당파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21대 총선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전에 지지하던 정당이 있던 사람들, 즉 무당파가 아닌 사람들도 투표 선택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만, 후보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후보자 개인 요인에 따라 투표 선택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부동층은 개념적으로 선거 직전까지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

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조성대 2013) 부동산 중에서 일부가 투표 변경을 할 가능성은 크지만, 부동산과 투표 변경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전 선거와 다르게 다음 선거에서 본인의 투표 선택을 변경 할까? 허쉬만(Hirschman 1970)의 주장처럼 이전에 투표했던 정당에 불만이 있을 때 유권자는 다른 정당에 투표하거나(exit),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할 것이다(voice). 투표 변경에 관한 많은 연구는 이러한 불만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크게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으로 투표 변경의 원인을 구분한다.

외생적 요인이란 새로운 정당이 출현했을 때를 의미한다. 다운스(Downs 1957)의 공간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는 본인의 정책 위치와 유사한 정당에 투표하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새로 등장한 정당의 정책 위치가 본인의 정책 위치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이전 선거에서 투표했던 정당이 아니라 본인과 정책 위치가 더 가까운 신생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선거를 분석한 스푼과 클루버(Spoon and Klüber 2019)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주요 정당들(mainstream parties)의 정책 거리가 가까워짐(convergence)에 따라 이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선호를 대표한다고 느끼지 못한 유권자 중 일부가 정책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극우정당에게로 투표를 변경하는 선택을 했다(Spoon and Klüber 2019). 한국 사례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처럼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고 기존의 민주당에 실망한 일부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에 투표한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이다(김진주 2019).

내생적 요인은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심리적 요인 등이 변하여 이전 선거에서 투표했던 정당이 아닌 당에 투표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권자의 경제적 지위 변화나 정당일체감 변화 등 보다 장기적인 변화요인이 있을 수 있고, 선거 시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이슈에 따른 선택이나 후보자 혹은 정당 지도자의 이미지에 따른 변화 등 보다 단기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Bartels 2012). 예를 들어, 레니 외 저자들(Reny et al. 2019)은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 투표하지 않았던 백인노동자들이 인종

과 이민문제에 대한 태도 때문에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 투표했다고 보았다. 또한, 영국 패널자료를 분석한 권혁용(Kwon 2019)의 연구는 우파정당 하에서 실업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이를 심각하게 여긴 사람일수록 좌파정당으로 투표를 변경할 확률이 높았지만, 좌파 정부 하에서의 실업률 악화는 동일한 투표 변경 효과를 가지지 못해서, 투표 변경에서의 이슈 소유(issue ownership)효과가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다른 나라 사례로 한 투표 변경에 관한 연구가 많은 데 비해, 한국 선거를 사례로 유권자의 투표 변경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민의당이라는 외생적 요인(김진주 2019),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내영·정한울 2007)나 이념성향(송진미 2019)이 투표 변경의 요인으로 분석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한 시점의 선거에 집중하고 있고 이전 선거와의 투표 선택과 비교하는 투표 변경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sup>3)</sup>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전 선거와 다르게 투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요인은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위기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평가이슈였다. 총선 직후 언론의 분석기사나 최근의 연구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여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고 보았다(김만권 외 2020; 신정섭 2020; 오세재 2020).

전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은 정치 행위나 정책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재난 상황 이후 선거를 분석한 여러 사례를 보면 재난 상황은 재난의 발생 그 자체로도, 또한 재난에 대처하는 정치인의 반응에 따라서도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

---

3) 한국 선거에서 투표 변경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한국선거연구자들의 관심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투표 변경을 연구할 정량자료가 부족했던 탓이라 짐작된다. 투표 변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전 선거와 현재 선거 시기를 모두 포함하는 패널 자료나, 일회성 설문조사에서의 이전 선거 투표 선택을 묻는 문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비교적 최근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루빈(Rubin 2020, 241)의 정리에 따르면 재난의 정치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맹목적 회고(blind retrospection) 효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정된 회고(mediated retrospection)이다. 전자의 경우, 유권자들이 재난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현직 정치인을 비난하고 심판한다는 관점으로, 폭우, 가뭄, 상어 공격이 현직 대통령의 득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 에이큰과 바텔(Achen and Bartles 2004)의 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조정된 회고 효과는 재난 그 자체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대응에 따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즉, 정치인이 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재정지원이나 재난구호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으로 잘 대응했다면, 유권자들이 그러한 지도자에게 표를 더 많이 주는 보상적 반응을 했다는 것이다 (Abney and Hill 1966; Bechtel and Hainmueller 2011; Gasper and Reeves 2011; Healy and Malhotra 2009; 2010; Reeves 2011; Remmer 2014).

위의 연구들에 기반한다면 코로나19 위기 역시 조정된 회고효과로 작동할 수 있다. 즉, 일차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거나 정당 명부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번 총선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신정섭(2020)의 연구 결과도 위의 가설을 지지한다.

이러한 발견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투표 변경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의 경우,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다.

보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 중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투표 선택이다. 만약 코로나19 대응의 긍정평가가 조정적 회고효과로 작동한다면, 지난 선거에

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도 투표 선택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지만,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부대응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 1 코로나19 대응과 투표 변경 간 상호작용 효과: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 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 1에 기반한 이론적 예측은 <그림 1>의 네 가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x축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평가이며, y축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다. 그래프 안의 두 선 중 실선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을 나타내며 점선은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타낸다. 이전 선거의 투표 선택과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 변수 간 상호작용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림 1>의 네 가지 그림과 같은 이론적 예측이 가능하다.

만약 이전 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이 현재 선거에서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코로나19 대응 변수만 영향을 미친다면,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즉,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을 것이고, 코로나 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유권자가 정당일체감이나 이념, 지역주의, 세대 등의 이유로 이전 선거에서 투표했던 정당에 다시 투표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기존의 민

주당 지지자들의 민주당에 대한 투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그림 (1)과 같은 결과는 비현실적이다. 반대로 그림 (2)는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평가가 전혀 영향력이 없고 이전 선거투표 선택만이 유의미한 경우인데, 이 역시 이번 21대 총선의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그림 (2)와 같은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림 1〉 이론적 예측

그림 (1) 코로나19 변수의 효과만 강하고, 당파적 효과가 없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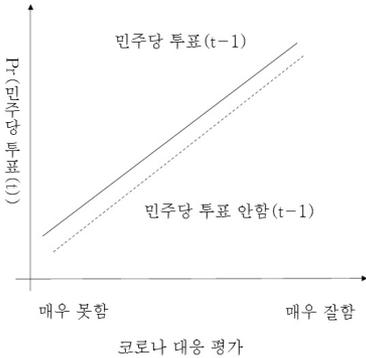


그림 (2) 코로나19 변수의 효과가 없고, 당파적 효과만 강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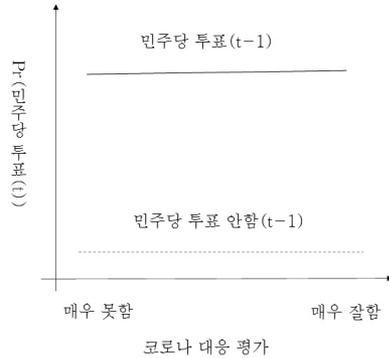


그림 (3) 당파적 효과가 있고, 코로나19 변수의 효과가 강하게 작동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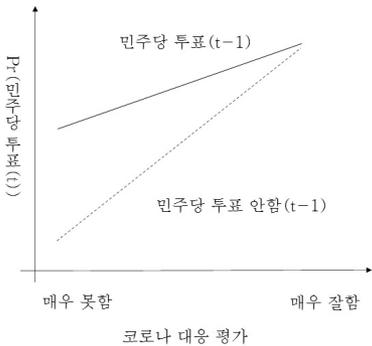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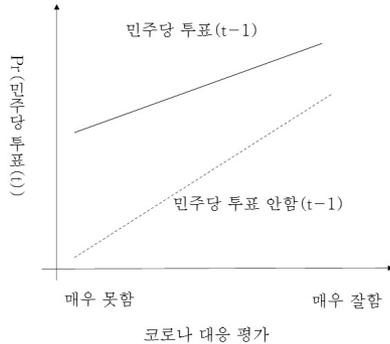


그림 (4) 당파적 효과가 있고, 코로나19 변수의 효과가 약하게 작동한다면,



두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작동한다면 그림 (3)이나 그림 (4)와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 그림 (3)은 이전 선거의 투표 선택이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코로나 19 대응평가에 대한 변수의 효과가 강하게 작동했을 경우를 나타낸다.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은 편인데, 이러한 확률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할 때 더 증가할 것이다.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라면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가장 낮겠지만, 코로나 대응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이들이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증가한다.

그림 (4)도 그림 (3)과 유사하지만, 그림 (3)과 그림 (4)의 차이는 코로나19 대응 평가변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다. 그림 (3)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을 때,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림 (4)는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증가할수록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증가하지만, 그것이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만큼 높아지는 않는 상황이다. 즉,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긍정평가가 부분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가설 1의 함의 중 하나는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가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위기상황이 만든 결과라는 것일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한 가장 큰 경쟁가설 중 하나는 야당심판론이다. 선거 기간 동안 야당 일부 의원들의 막말, 공천 파동 등 야당의 무능한 모습으로 인해 야당을 바람직한 대안세력으로 보지 않은 국민들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찍지 않고 여당에 투표했다는 해석이다. 예를 들어 장승진(2020)의 연구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정당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일수록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따라 투표했음을 보여주는데, 이 연구의 함의 역시 21대 총선이 코로나

19라는 외생적인 요인에만 좌우된 선거가 아니라, 여야 정당의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라는 내생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선거임을 보여준다.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에게는 야당심판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야당심판론이 없었어도 미래통합당에 투표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질문은 야당심판론이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작동했을까이다. 만약 이들이 야당심판론에 공감했다면 이전 선거와 달리 여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즉, 이번 선거에서 야당심판론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야당심판론과 이전 선거 투표 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가설 2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이론적 예측 역시 <그림 1>과 동일하다.

가설 2 야당심판론과 투표 변경 간 상호작용: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지만, 야당심판론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 III. 경험분석

#### 1. 자료와 변수측정

본 연구의 경험 분석을 위해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총선 직후인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를 사용했다. 종속변수인 21대 총선 투표 선택은 지역구와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를 따로 구분하여,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사람을 1로, 나머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을 0으로 한 지역구투표 더미 변수를 생성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을 1로, 나머지 정당에 투표한 사람을 0으로 한 비례투표 더미 변수를 생성했다. 두 변수 모두에서 기권이나 모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하여 대조군에 포함했다.<sup>4)</sup>

독립변수 중 하나는 20대 총선 투표 선택이다. 분석의 결과를 해석할 때,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설과 일치하며 이해가 직관적이므로,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외 다른 정당의 후보에 투표했거나 기권한 사람을 1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을 0으로 한 더미 변수(20대 총선 지역구 민주당 비투표)를 생성했다. 비례대표 선거 역시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외 나머지 정당에 투표했거나 기권한 사람을 1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을 0으로 한 비례투표 더미 변수(20대 총선 비례대표 민주당 비투표)를 생성했다. 기권을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분석한 경우도 결과는 유사했다.

또 다른 독립변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이다.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문항에 대해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1로,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2로,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3으로, 그리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4로 한 4점 척도로 코딩하였다.

야당심판론은 이번 선거는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위 의견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면 1

---

4) 투표에 참여해서 특정한 정당을 선택하는 것과 기권하는 것의 논리적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투표 선택에 관한 연구들은 보통 기권이나 모름 응답을 결측값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 19 대응이나 야당심판론으로 인해 기존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투표할 결심을 하거나, 반대로 새누리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기권한 사람들도 대조군에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0으로 코딩하고 분석에 포함했다.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기권했거나 모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같은 분석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는 본문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면 2점, 대체로 공감하면 3점, 그리고 매우 공감하면 4점인 4점 척도로 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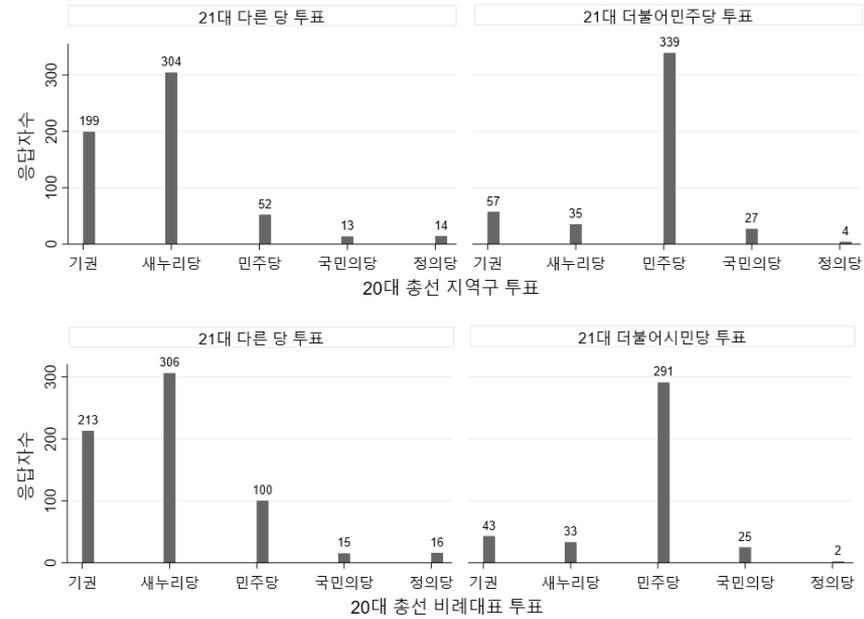
통제변수로는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성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평가이념과 정책 태도가 포함되었고, 가계소득, 학력, 연령, 성별, 현 거주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도 포함되었다. 자기평가이념은 가장 진보를 0점으로 하고 가장 보수를 10점으로 한 11점 척도의 변수이다. 자기평가방식으로 이념을 측정하는 것은 주관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념의 대리지표로 정책에 대한 태도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노동, 소득분배, 복지확대, 최저임금 등의 경제영역, 북한과의 대화,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문제 영역과 동성애나 입시문제 등 사회영역을 망라한 총 17개의 문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합해서, 진보에서부터 보수로 갈수록 수치가 커지는 4점 척도로 만들었다. 가계소득은 가족 한 달 가구소득을 100만 원 미만에서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각 100만 원 단위로 응답하게 한 11점 척도이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대학원 박사 재학 이상까지 총 7점 척도로 된 변수이다. 지역주의 성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인의 고향이 영남 지역이라고 한 사람을 1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한 영남 고향 더미 변수와 본인의 고향이 호남지역이라고 한 사람을 1로 하고 나머지 지역 거주지는 0으로 한 호남 고향 더미를 각각 생성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044명이 응답했지만 자신의 이념을 모른다고 응답한 37명을 결측값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통계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수는 1,007명이다. 통계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기초 통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1대 총선 투표					
지역구 민주당 투표	1,007	0.456	0.498	0	1
비례대표 민주당 투표	1,007	0.387	0.487	0	1
20대 총선 투표					
지역구 민주당 비투표	1,007	0.615	0.487	0	1
비례대표 민주당 비투표	1,007	0.634	0.482	0	1
코로나19 대응평가	1,007	2.875	0.662	1	4
야당심판론	1,007	2.642	0.815	1	4
자기평가이념	1,007	5.081	2.263	0	10
정책태도	1,007	2.305	0.475	1.021	4
가계소득	1,007	4.953	1.653	1	11
학력	1,007	3.829	1.006	1	6
연령	1,007	47.375	14.441	20	85
여성	1,007	0.501	0.500	0	1
영남 고향	1,007	0.292	0.455	0	1
호남 고향	1,007	0.170	0.376	0	1

<그림 2> 20대와 21대 총선 투표 비교



통계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설문응답자 중 몇 명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았거나 기권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사람은 123명으로 전체 응답자 1,044명 중 11.78%이다.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113명(10.82%)이 20대 총선에서 다른 정당에 투표하거나 기권했지만, 이번 21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했다.)

5) 설문응답자의 대략 11% 정도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전 투표와 다른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서울의 총 47개 선거구의 평균 득표율 차이는 10.48%였고, 당선자와 2위 득표자 간 득표율 차이가 10% 이내인 지역구는 47개 중 14개였다.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은 서울 용산으로 총 809표 (0.7%p) 차이였다.

## 2. 통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들을 확인하기 전에 코로나19와 야당심판론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변수였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 2>는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 선택을 종속변수로 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 결과이다. 모델 1과 모델 3은 가설 1의 독립변수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평가만을 확인한 모델이고 모델 2와 모델 4는 가설 2인 야당심판론의 효과를 확인한 모델이며, 모델 5와 모델 6은 두 변수를 모두 포함한 결과이다. 모델 1, 3, 5는 지역구 투표가 종속변수인 모델이며, 모델 2, 4, 6은 비례대표 투표가 종속변수인 모델이다.

이번 선거 직후 나온 분석들과 유사하게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할수록 또한 야당심판론에 공감할수록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도 높았다. <표 2>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의 주제인 20대와 21대 간 투표 변경이 아니라 21대 투표 선택만을 고려했을 때에도 코로나19와 야당심판론이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가설 1과 가설 2가 주장하는 상호작용 효과의 전제가 타당함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2〉 21대 총선 투표: 코로나 19와 야당심판론의 효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0.733*** (0.161)		0.573*** (0.154)		0.504** (0.165)	0.403* (0.159)
야당심판론		1.053*** (0.136)		0.738*** (0.123)	0.983*** (0.137)	0.680*** (0.126)
자기평가이념	-0.770*** (0.067)	-0.744*** (0.067)	-0.586*** (0.055)	-0.555*** (0.055)	-0.720*** (0.067)	-0.537*** (0.056)
정책태도	-0.190 (0.190)	-0.211 (0.185)	-0.189 (0.186)	-0.195 (0.177)	-0.008 (0.199)	-0.033 (0.190)
가계소득	0.154** (0.060)	0.165** (0.062)	0.022 (0.058)	0.022 (0.060)	0.149* (0.064)	0.007 (0.060)
학력	-0.039 (0.120)	-0.079 (0.125)	-0.017 (0.117)	-0.041 (0.118)	-0.096 (0.127)	-0.053 (0.119)
연령	0.020* (0.008)	0.017* (0.008)	0.019* (0.007)	0.016* (0.007)	0.015+ (0.008)	0.015* (0.007)
여성	-0.288 (0.177)	-0.298 (0.185)	-0.043 (0.167)	-0.014 (0.170)	-0.291 (0.187)	-0.005 (0.172)
영남 고향	-0.248 (0.197)	-0.284 (0.204)	-0.497* (0.198)	-0.505* (0.198)	-0.264 (0.207)	-0.495* (0.200)
호남 고향	1.565*** (0.347)	1.480*** (0.349)	0.955*** (0.263)	0.881*** (0.264)	1.466*** (0.349)	0.870*** (0.264)
상수	0.419 (1.073)	-0.048 (0.935)	0.177 (1.002)	-0.044 (0.897)	-1.680 (1.113)	-1.351 (1.039)
관찰개수	1,007	1,007	1,007	1,007	1,007	1,007
Pseudo R-squared	0.401	0.437	0.308	0.328	0.443	0.333
Log likelihood	-415.8	-391	-465	-451.6	-386.9	-448.5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lt;0.001, \*\* p&lt;0.01, \* p&lt;0.05, + p&lt;0.1

<표 3>은 본 연구의 주요 주장인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21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더미 변수이다. 모델 1, 3, 5는 지역구 투표결과이고, 모델 2, 4, 6은 비례대표투표결과이다. 모델 1과 모델 2는 이전 선거의 투표 선택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 간 상호작용모델(가설 1)의 결과이며, 모델 3과 모델 4는 이전 선거의 투표 선택과 야당심판론 간 상호작용모델(가설 2)의 결과이다. 모델 5와 6은 코로나19 대응과 야당심판론을 함께 포함한 모델이다.

모델 1과 2의 첫째 줄과 둘째 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설 1의 예상대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일수록 이번 21대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고,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도 높았다. 또한, 모델 3과 모델 4의 넷째 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설 2의 예상대로 야당심판론에 공감한 사람일수록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 역시 높았다. 상호작용 효과의 해석은 각각 <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은 모델 1과 2의 상호작용 효과이며, <그림 4>는 모델 3과 4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표 3> 가설 1과 가설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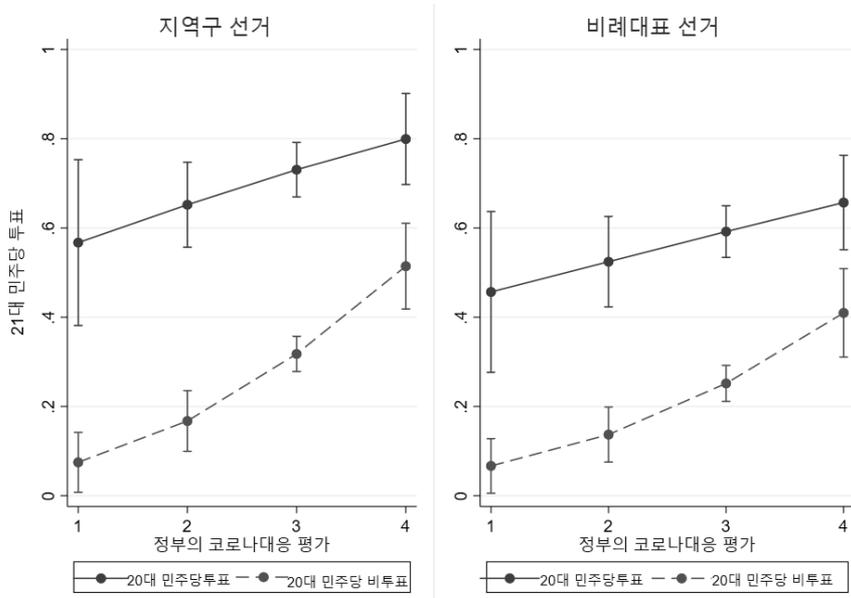
	모델 1 지역구 투표	모델 2 비례대표 투표	모델 3 지역구 투표	모델 4 비례대표 투표	모델 5 지역구 투표	모델 6 비례대표 투표
20대 민주당 비투표	-4.595*** (1.114)	-3.546*** (0.979)	-5.572*** (0.912)	-4.338*** (0.751)	-5.751*** (1.228)	-4.479*** (1.044)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0.501+ (0.287)	0.341 (0.228)			0.514+ (0.294)	0.356 (0.231)
20대 민주당 비투표 * 코로나19 평가	0.697+ (0.374)	0.570+ (0.318)			0.173 (0.390)	0.136 (0.332)

야당심판론			0.320 (0.250)	0.167 (0.182)	0.297 (0.251)	0.152 (0.184)
20대 민주당 비투표 * 야당심판론			1.156*** (0.323)	0.936*** (0.259)	1.016** (0.329)	0.831** (0.271)
자기평가이념	-0.587*** (0.069)	-0.416*** (0.058)	-0.596*** (0.071)	-0.414*** (0.060)	-0.565*** (0.072)	-0.393*** (0.061)
정책태도	0.158 (0.217)	0.068 (0.193)	0.078 (0.216)	-0.019 (0.188)	0.327 (0.235)	0.156 (0.201)
가계소득	0.165* (0.072)	-0.010 (0.063)	0.169* (0.073)	-0.010 (0.062)	0.145+ (0.075)	-0.027 (0.063)
학력	-0.084 (0.144)	-0.020 (0.128)	-0.089 (0.144)	-0.033 (0.128)	-0.114 (0.147)	-0.047 (0.129)
연령	0.008 (0.009)	0.010 (0.008)	0.006 (0.009)	0.008 (0.008)	0.003 (0.009)	0.006 (0.008)
여성	-0.095 (0.203)	0.109 (0.181)	-0.087 (0.214)	0.126 (0.184)	-0.079 (0.217)	0.134 (0.186)
영남더미	0.026 (0.246)	-0.336 (0.228)	-0.012 (0.256)	-0.365 (0.229)	0.032 (0.256)	-0.337 (0.231)
호남더미	1.312*** (0.305)	0.837** (0.256)	1.400*** (0.330)	0.843** (0.263)	1.373*** (0.330)	0.823** (0.264)
상수	1.509 (1.356)	0.994 (1.143)	2.378+ (1.227)	1.845+ (1.045)	0.585 (1.488)	0.551 (1.238)
관찰갯수	1,007	1,007	1,007	1,007	1,007	1,007
Pseudo R-squared	0.519	0.387	0.548	0.404	0.554	0.409
Log likelihood	-333.5	-412.2	-313.7	-400.4	-309.2	-397.5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 p<0.01, \* p<0.05, + p<0.1

<그림 3> 이전 선거의 투표 선택과 코로나19 대응 평가 간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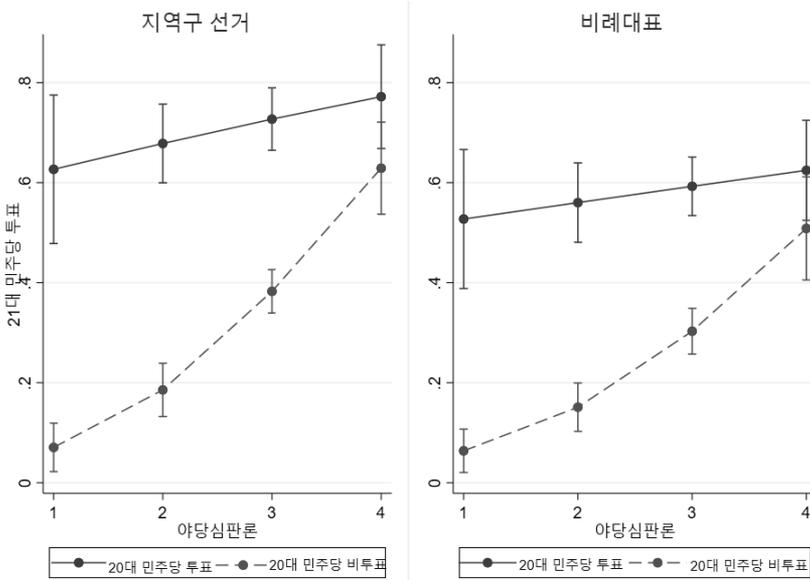


<그림 3>의 왼쪽 그림은 <표 3>의 모델 1을 사용하여 21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확률을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표 3>의 모델 2를 사용하여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두 그림의 실선에서 알 수 있듯이 20대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일수록 다른 정당에 투표한 사람보다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으며, 이런 확률은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더욱 높아진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된 20대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점까지 가더라도 민주당을 투표할 확률이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의 확률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즉, 이는 <그림 1>의

이론적 예측 중 그림 (4)에 더 가까운 결과로써, 코로나19 대응평가의 효과가 약하게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림 4> 이전 선거의 투표 선택과 야당심판론 간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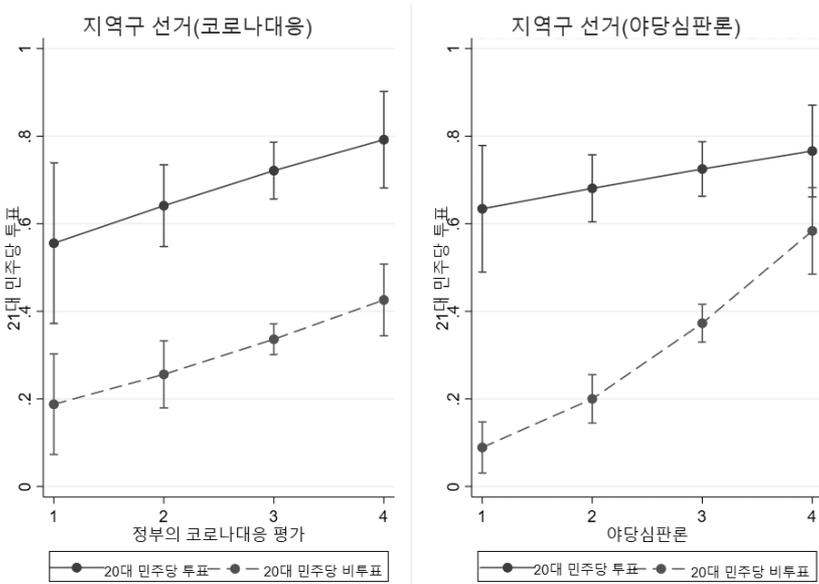


<그림 4>는 20대 총선의 투표 선택과 야당심판론 간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왼쪽 그림은 <표 3>의 모델 3을 사용한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표 3>의 모델 4를 사용한 그림이다.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일수록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고,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후자 중 야당심판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일수록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흥미로운 점은 야당심판론에 매우 공감하는 사람들(x축의 4점)의 확률이다. 이전까지는 20대 선거 때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과

아닌 사람들 간의 투표 확률이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 야당심판론에 매우 공감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나 찍지 않았던 사람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둘 다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의 이론적 예측에서 그림 (3)에 해당하는 결과로, 야당심판론의 효과가 강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효과와 야당심판론의 효과 중 무엇이 투표 변경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상호작용변수를 모두 함께 모델에 포함한 <표 3>의 모델 5와 6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5>는 <표 3>의 모델 5를 사용하여 코로나19 대응평가와 야당심판론 변수의 영향력을 보여준 그림이다.

<그림 5> 코로나대응평가 vs 야당심판론



<그림 5>의 결과는 <그림 3>과 <그림 4>의 결과와 동일하다. 즉, 코로나19대

응 평가변수와 야당심판론을 함께 모델에 포함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에도,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 중 야당심판론에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효과와 야당심판론의 효과가 함께 비교될 때에도 야당심판론의 효과가 더 컸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긍정평가가 이전에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이들의 민주당 투표확률을 올려주긴 했지만, 그 증가 값이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이들의 확률만큼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야당심판론의 경우, 야당심판론에 매우 공감한 사람들은 이전 선거 투표 선택과 무관하게 모두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sup>6)</sup>

### 3. 추가분석: 이념, 지역, 세대별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을 사람들의 선택은?

코로나19라는 외생요인이 없었더라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절의 분석은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이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간주하여 이들의 투표 변경 여부 및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없는 통상적인 정치환경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다면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을만한 사람들은 이들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선거연구에서 투표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언급되는 요소인 이념, 지역, 세대 요인을 기준으로 보면,

6) 통제변수에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를 포함할 것을 권유한 심사평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 대응평가와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는 개념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매우 높아서 통제변수로 넣지 않았다. 그러나 분석의 강건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 3>과 동일한 모델에 통제변수에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를 넣어서 추가분석을 한 결과, 코로나19 대응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사라졌지만 야당심판론의 효과는 변하지 않아서, 본 연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수성향의 이념을 가진 사람, 고향이 영남인 사람들, 그리고 노년층일수록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다. 만약 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영향을 받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했다면, 이번 선거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긍정 대응으로 인한 승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적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19대응에 대한 의견과 무관하게 민주당을 찍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를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평가가 영향을 끼친 선거라고 결론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3절에서는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은 보수, 영남출신 및 노년층의 투표 선택을 <표 3>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했다.

우선, 자기평가이념이 보수라고 응답한 384명 중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사람은 55명(14.32%, 전체 응답자 1,007명 중 5.46%)이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은 45명(11.72%, 전체 응답자 1,007명 중 4.47%)이다. 고향이 영남지역인 사람 318명 중에서는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사람은 74명(23.27%, 전체 응답자 1,044명 중 7.09%)이며,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은 57명(17.92%, 전체 응답자 1,044명 중 5.46%)이다. 60세 이상 노년층 278명 중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은 98명(35.25%, 전체 응답자 1,044명 중 9.39%)이고, 정당 명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은 88명(31.65%, 전체 응답자 1,044명 중 8.43%)이다.

〈표 4〉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은 이들의 투표 선택

	모델 1 이념별	모델 2 영남출신별	모델 3 노년세대별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0.657*** (0.186)	0.668** (0.203)	0.488** (0.189)
보수 * 코로나19 평가	-0.062 (0.315)		
보수(더미변수)	-3.488*** (0.992)		
야당심판론	0.911*** (0.144)	1.023*** (0.167)	1.105*** (0.167)
보수 * 야당심판론	0.648* (0.302)		
영남 * 코로나19 평가		-0.386 (0.310)	
영남 * 야당심판론		-0.058 (0.283)	
노년 * 코로나19 평가			0.140 (0.367)
노년 * 야당심판론			-0.447 (0.286)
노년(60세 이상 더미)			0.957 (1.153)
자기평가이념		-0.742*** (0.065)	-0.700*** (0.066)
정책태도	-0.180 (0.193)	-0.116 (0.219)	0.021 (0.196)

가계소득	0.153** (0.060)	0.128* (0.065)	0.139* (0.064)
학력	-0.059 (0.117)	-0.150 (0.124)	-0.172 (0.120)
연령	0.008 (0.008)	0.017* (0.008)	
여성	-0.290+ (0.174)	-0.305 (0.188)	-0.291 (0.187)
영남더미	-0.456* (0.200)	0.737 (1.029)	-0.248 (0.209)
호남더미	1.603*** (0.307)		1.502*** (0.344)
상수	-4.345*** (1.079)	-1.404 (1.184)	-1.151 (1.043)
관찰갯수	1,007	1,007	1,007
Pseudo R-squared	0.375	0.424	0.442
Loglikelihood	-433.9	-399.5	-387.4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 p<0.01, \* p<0.05, + p<0.1

<표 4>는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따라 혹은 야당심판론에 따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보수이념 더미 변수와의 상호작용 분석결과는 <표 4>의 모델 1과 <그림 6>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남 출신 더미 변수와의 상호작용 분석결과는 <표 4>의 모델 2과 <그림 7>로, 60세 이상 노년층 더미 변수와의 상호작용 분석결과는 <표 4>의 모델 3과 <그림 8>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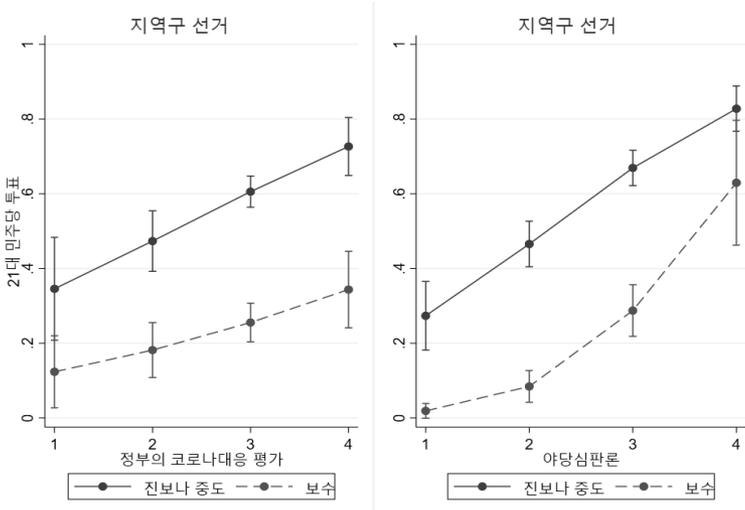
<표 4>의 모델 1과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매우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든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모두 낮다. 이들을 제외하면 스스로 중도나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낮은 민주당 투표확률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와 비례해서 증가해서, 이념성향이 보수라서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은 사람 중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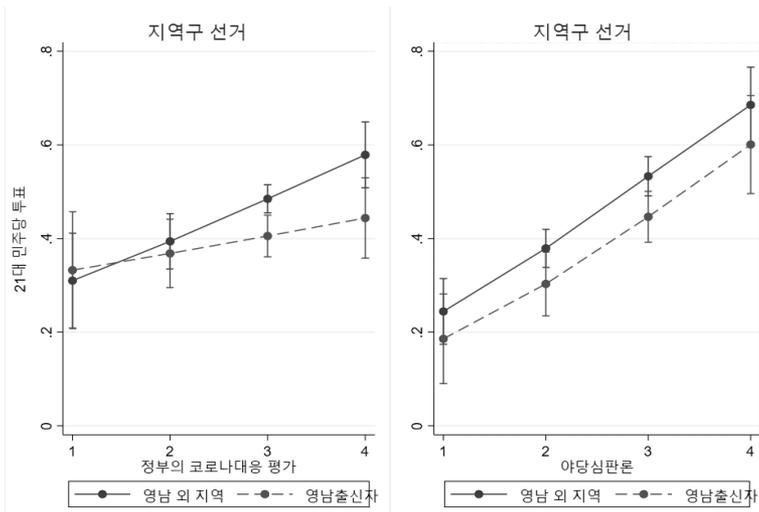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효과는 <그림 6>의 오른쪽 그림인 야당심판론과 비교한다면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야당심판론에 매우 공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진보나 중도성향자와 유사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2절의 분석에서 확인한 것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긍정효과가 있지만, 야당심판론의 효과가 이보다 더 크다.

반면, 모델 2와 3의 결과를 보면 지역주의나 세대는 21대 총선의 투표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모델 2와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영남 출신인 사람과 다른 지역 출신자 간의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에 의해 이 두 집단 간 투표확률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도 않았다. 야당심판론의 효과 역시 영남출신자와 다른 지역 출신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또한, 모델 3과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60세 이상 노년층과 60세 미만 연령집단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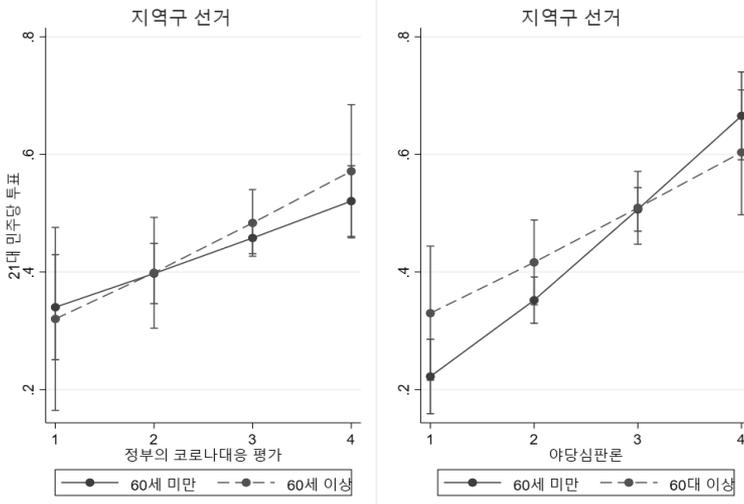
〈그림 6〉 보수 대(對) 비보수



〈그림 7〉 영남지역 거주자 대(對) 다른 지역 거주자



〈그림 8〉 60세 이상 노년층 대(對) 60세 미만 세대



#### I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와 야당심판론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에 기여한 유의미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했으며, 야당심판론에 공감할수록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했다.

코로나19 대응과 야당심판론의 효과를 비교한다면, 둘 중 야당심판론의 효과가 더 강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긍정평가가 이전에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이들의 민주당 투표확률을 올려주긴 했지만, 그 증가 값이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이들의 확률만큼 높지는 않았다. 반면, 야당심판론에 매

우 공감한 사람들은 이전 선거 투표 선택과 무관하게 모두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추가로 이념, 출신 지역, 세대별로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은 사람들의 투표 선택을 동일하게 분석했는데, 보수이념성향의 유권자 중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또 야당심판론에 공감할수록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위의 분석결과는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코로나19 대응평가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님을 함의한다. 야당 의원의 막말이나 공천 파동 등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능해 보였던 야당에 대한 실망감이 더 강하게 작동하여, 이전에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이들과 보수이념 유권자들의 투표 변경을 만들어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전염병 위기에 잘 대응한 정부로부터의 이익을 통한 승리이기도 하지만, 야당의 무능으로 인한 어부지리로 더 큰 이득을 본 승리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명구·하세현. 2014. “지역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과 지방정치.”『한국정치학회보』 48권 1호, 55-77.
- 길정아. 2013.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 22권 1호, 81-108.
- 김만권·박정은·서복경·이관후·정한울. 2020. “[좌담회] 21대 총선, 평가와 전망.”『시민과 세계』36호, 159-175.
- 김진주. 2019.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 변경 요인.”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지민. 2020. “여당 압승에 ‘이게 모두 황교안 탓’이라는 그 신문들”『미디어오늘』 (4월 16일) [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86](http://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86)
- 윤종빈·김윤실·정희옥. 2015.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와 정당일체감.”『한국정치학회보』 14권 2호, 83-113.
- 장승진. 2020.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누구를 언제 심판하는가? 제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조건부 회고적 투표.”『한국정치학회보』54권 4호, 83-105.
- 조기숙. 2013. “정당지지'에 기초한 선거예측 종합모형.”『한국정치학회보』 47권 4호, 71-92.
- 조성대. 2013. “부동층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보』 47권 3호, 109-129.
- 송진미. 2019. “보수정당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2012-2017 대선 패널데이터 분석.”『한국정치연구』28권 1호, 109-146.
- 신정섭. 2020. “코로나19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 정부대응 평가와 개인피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서울. 8월.
- 오세제. 2020. “수구보수 청산이 촛불 민심이다: 민주당의 제21대 총선전략과 지역 세대변수 평가.”『경제와 사회』126호 174-208.
- 이내영·정한울. 2007. “이슈와 한국 정당지지의 변동.”『한국정치학회보』 41권 1호, 31-55.
- 최준영. 2016. “정당일체감의 기능주의적 모델.”『OUGHTOPIA』31권 1호, 299-325.

- Achen, Christopher H. and Larry M. Bartels. 2004. "Blind Retrospection Electoral Responses to Drought, Flu, and Shark Attacks." *Estudio/Working Paper* 2004/199 June 2004.
- Abney, F. Gleen and Larry B. Hill. 1966. "Natural Disasters as a Political Variable: The Effect of a Hurricane on the Urban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0(4): 974-981.
- Bechtel, Michael M. and Jens Hainmueller. 2011. "How Lasting is Voter Gratitude? An Analysis of the Short- and long-term Electoral Returns to Beneficial Poli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4): 852-868.
- Gaspar, John T. and Andrew Reeves. 2011. "Make It Rain? Retrospection and the Attentive Electorate in the Context of Natural Disast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2): 340-355.
- Healy, Andrew and Neil Malhotra. 2009. "Myopic Voters and Natural Disaster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3(3): 387-406.
- Healy, Andrew and Neil Malhotra. 2010. "Random Events, Economic Losses, and Retrospective Voting: Implications for Democratic Competence."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3(3): 387-406.
- Hirschman, Albert.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won, Hyeok Yong. 2019. "Government Partisanship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The Effect of Perceived Employment Situation on Partisan Vote Switch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2(3): 727-743.
- Reeves, Andrew. 2011. "Political Disaster: Unilateral Powers, Electoral Incentives, and Presidential Disaster Declarations" *Journal of Politics*. 73(4): 1142-1151.
- Remmer, Karen. 2014. "Exogenous Shocks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Evidence from the Caribbea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7(8): 1158-1185.
- Reny, Tyler T, Loren Collingwood and Ali A Valenzuela. 2019. "Vote Switching in the 2016 Election: How Radical and Immigration Attitudes, Not Economics,

Explain Shifts in White Voting.”*Public Opinion Quarterly* 83(1): 91-113.

Rubin, Oliver. 2020. “The Political Dynamics of Voter Retrospection and Disaster Responses.” *Disasters* 44(2): 239-261.

Spoon, Jae-Jae and Heike Kluver. 2019. “Party Convergence and Vote Switching: Explaining Mainstream Party Decline across Europe.”*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8:1021-1042.

투고일: 2020.10.30.	심사일: 2020.11.08.	게재확정일: 2020.11.22.
------------------	------------------	--------------------

# Effects of COVID-19 Crisis and Punishment on the Opposition Party on Vote Switch in the Korean 21st General Elections.

Park, Sun-kyoung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What makes the victory of the Minjoo Party in the Korean 21st general elections? Some argue that government's effective reaction to COVID-19 crisis contributes to the governmental party's winning, while others mention the major opposition party's strategic mistakes. To evaluate an empirical validity of these arguments, this paper analyzes effects of these two issues on vote switch, using a post-election public opinion survey. Results from interaction models show that those who did not vote for the Minjoo Party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are more likely to vote for the Mijjoo Party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as they positively evaluate government's reaction to COVID-19 crisis. Vote switch also occurs when people agree to punish the major opposition party. This outcome implies that the Minjoo Party takes advantage of the government's effective reaction to the COVID 19 crisis and the major opposition party's mistakes, as well.

---

**Key Words** | 21st General Elections, Vote Switch, COVID-19, Punishment On the Opposition Party, Interaction Effects.